

**【1부】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사례와 쟁점****| 쟁점 안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와 쟁점**

- 구자인 센터장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제8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in 아산

- 쟁점 토론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행정 직영과 민간위탁”



### 쟁점 토론 : “중간지원조직의 직영과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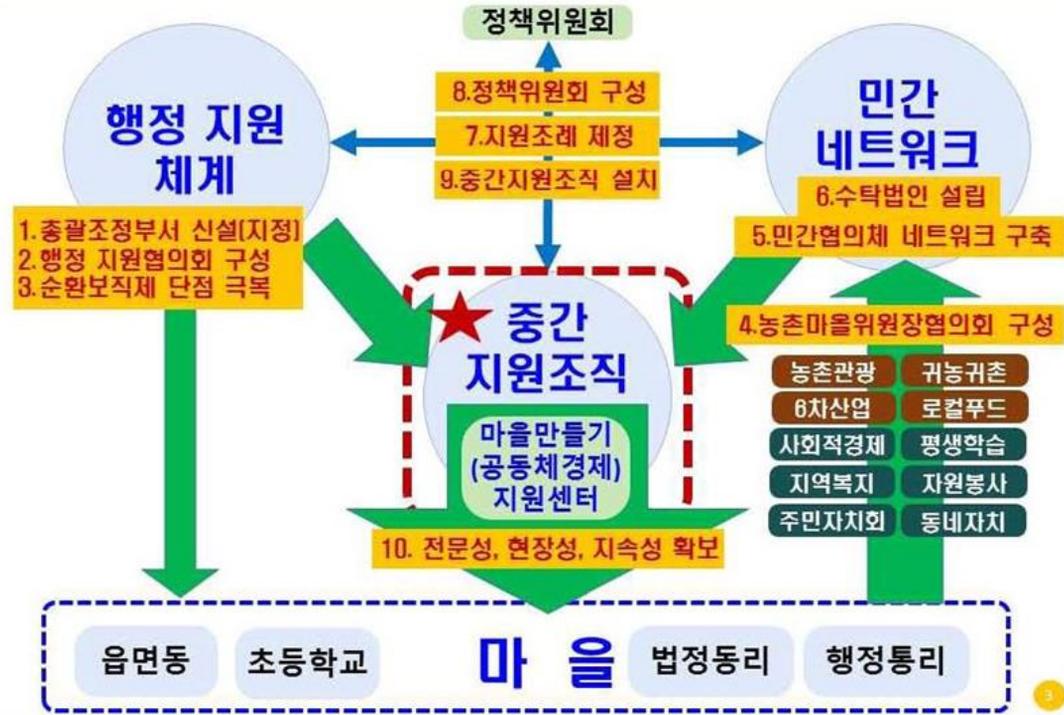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의 공동학습과 합의를 통해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직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민간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원하여 민간 운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5 전국 마을선언 초안, 제26절 2항)

## 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의 10대 핵심과제



## 지원센터의 성격과 역할 : “일 잘하는 전문조직”

- (1) 지원센터의 **성격** : 1) 조례에 근거한 행정 ‘사업’  
2) 전문가가 상주하는 ‘조직’ 3) 창구역할의 사무실 ‘공간’

### (2) 지원센터의 기본 역할

- 일상적인 마을 상담과 컨설팅
- 찾아가는 마을 주민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상담과 프로그램 지원
- 마을 **조사 및 분석**과 정보 수집 및 정리
- **소식지**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 및 SNS 관리
- 기타 행정에서 위탁하는 사업

마을의 ‘친구’  
마을만들기의 ‘복덕방’  
사람과 사람의 ‘중매쟁이’

행정을 대신하여 민간 법인이 수행하는 현장밀착 **공익** 역할

## [민간위탁]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 반영 - “조례 규정 사항”

- 조례에 근거한 공공성 사무의 민간 위탁 : 관설민영(官設民營)이 일반적
- 행정과 민간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 : 민관 거버넌스 관점이 중요
- 지역내 비영리 법인의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민간 인큐베이팅 의지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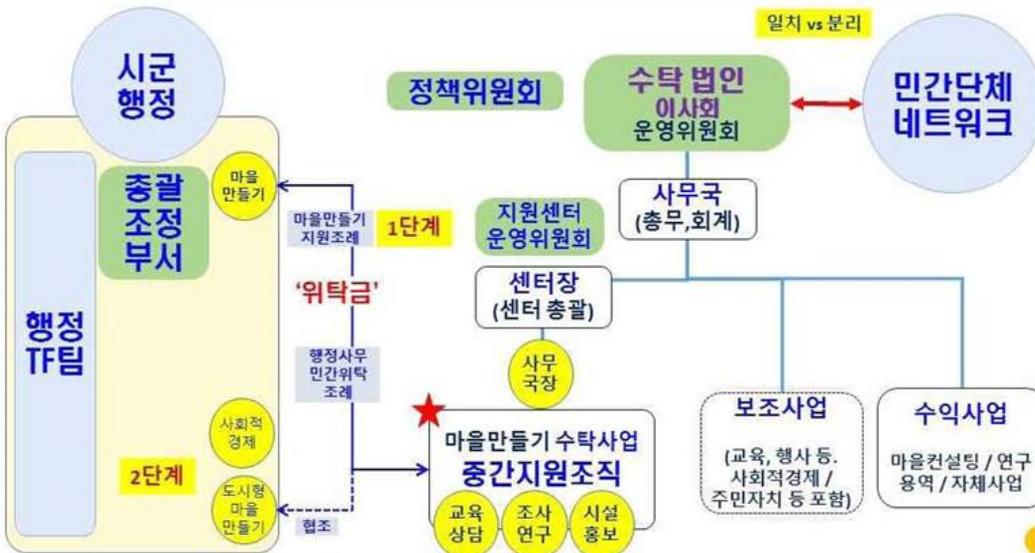
구분	관설관영	★ 관설민영	민설민영
설립주체	행정	행정	민간단체
운영주체	행정	민간단체(공개입찰 선정)	민간단체
직원	공무원(임기제, 기간제)	민간단체 직원(전임)	민간단체 직원(전임)
사업자금	행정예산	행정예산(위탁금) (수탁기관이 자체 수익금으로 독자사업 추진)	자체 자원 (일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
자유도	각종 법·제도의 규제를 받지만 안정적 운영 가능	수탁기관의 능력(전문성과 교섭력, 경제력)이 좌우	자유롭지만 재정적 불안정
장점	예산의 안정성과 연속성	공설민영과 민설민영 쌍방의 장점 가능	민간의 주체성 발휘
문제점	행정주도형으로 자율성과 창의성 부족 업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행정 지원 역할이 강조	위탁절차에 따른 정치적 문제발생 가능성 수탁기관의 재정적 불안정 존재	안정된 운영을 위해 높은 경영 감각 요구
한국 사례	광주 남구, 서울 금천구/도봉구/은평구, 아산시, 논산시 등	서울시(광역), 서울시 성북구, 전북 완주군 등 대부분의 사례	전북 진안군, 홍성군, 홍동면 마을활력소, 광주시 북구 시화문화마을지원센터

자료: 지역재단(2014)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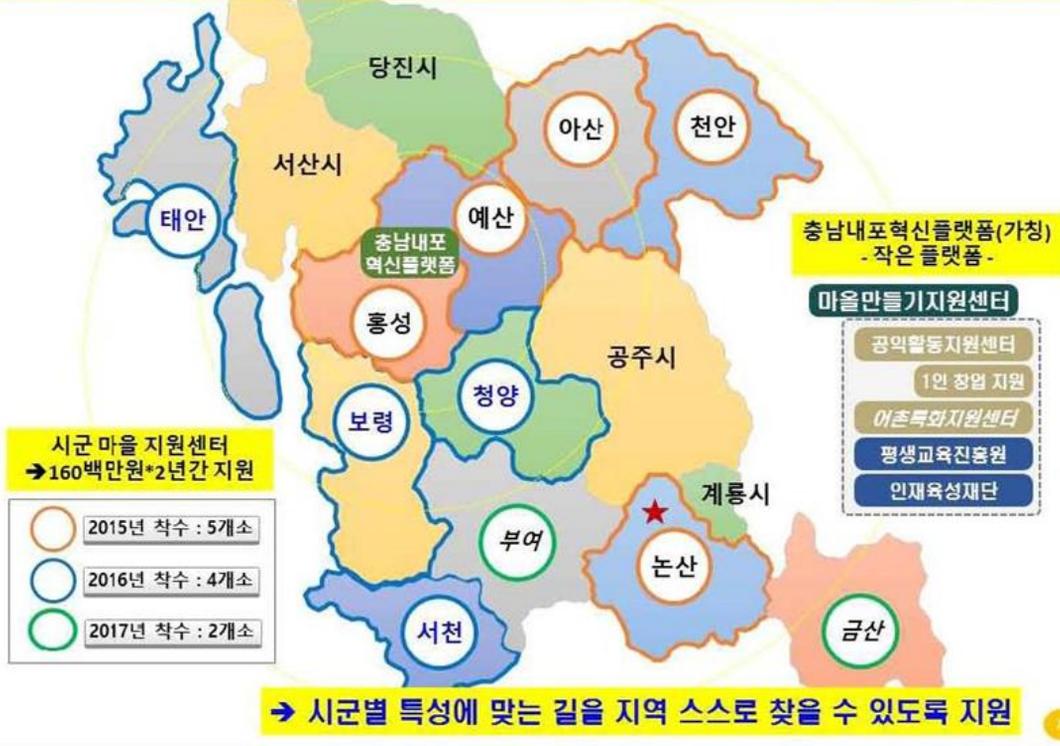
## 중간지원조직 위수탁 : 행정과 네트워크, 법인의 관계

- 행정과 민간의 대등한 협력관계  
= 민간의 칸막이를 극복한 네트워크 조직 설립

### 조례(위탁 근거) + 민간 법인 = 지원센터 설치



## 충남 시·군 지원센터 추진상황 - 2017년 9월 현재, 11개 시·군 추진중



## 시·군 자치단체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3\_중간지원조직

- 민간 운영 : (예산), 천안, 홍성, 보령 등 4개 시군
- 행정 직영 : 아산, 논산, 서천, 청양 등 4개 시군
- 2017년 하반기 행정 직영 개소 : 태안 등

시·군	센터명	개소	운영방식	센터장	상근인력	사무실	민간넷
아산시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	2015.09	행정직영	-	2명	충남 경제진흥원	아산시공동체경제네트워크
논산시	논산시 지원센터 (추진단)	2015.10	행정직영	-	4명	논산시 공설운동장	(추진중)
예산군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2015.11	보조사업 운영	이경진 (반상근)	3명	공주대학교 (예산)	(추진중)
보령시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6.03	민간법인수탁운영 ('17년2월 결정)	권영진 (비상근)	4명	농업인화관	(사)민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천안시	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	2016.08	민간법인수탁운영	공정해 (비상근)	4명	원도심종합지원센터	(사)천안시공동체네트워크 함께아름
홍성군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6.11	민간법인수탁운영	염창선 (비상근)	4명	청운대학교 희망관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서천군	서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6.05	행정직영	-	2명	쌀문화센터	(추진중)
청양군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7.04	행정직영	-	1명	군청앞	(추진중)

※2017년신규추진: 금산군, 부여군(논의시작), 공주시나들이센터(전환모색), 2018년 2개 시군 신규 공모중

## [쟁점토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

**10대 쟁점** : (1) 임의로 도출된 쟁점이고, 이외에도 많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시간 제약으로 모두를 깊이 토론할 수는 없습니다.

**3대 토론 쟁점** : (1) 10대 쟁점 모두 소개  
 (2) 사전 투표를 통해 집중 토론이 필요한 3대 쟁점 도출

**토론 방식** : **1인당 1회 1분** 제한. 연속 2회 발언 자제. **최소 1회** 이상 발언  
 (1) 3대 쟁점에 대해 각각 **20분 정도**로 토론  
 (2) 각 쟁점별로 '동의', '반대'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 의견 제시  
 - 중간 영역이 아니라 **'굳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관점에서  
 (3) 슬라이드 화면에 기록을 남기고 함께 보면서 쟁점에 대한 공감대 확보  
 -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차이)'**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존중  
 (4) 각자 배포된 A4용지와 스티커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돌아가실 때 제출  
 - 행사 결과는 웹진(뉴스레터)에 공개

9

## [쟁점토론1]

### “행정 직영방식을 거치는 것이 한국 지역현실에 맞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	반대
① 한국 지방자치 현실과 농촌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 직영을 거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성격과 역할을 행정이나 민간이 이해하기 쉽고, 상근자도 행정 실무를 익힐 수 있어 좋다. ③ 민간에서 먼저 운영하면 시행착오가 많고 불필요한 갈등만 많아진다. ④ 반드시 행정 직영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민간위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 직영을 우선시하면 민간의 행정 의존 의식이 더욱 심해지고, 자립심은 높아지지 않는다. ③ 행정 직영으로 시작하면 상근자들도 일하기 힘들고 관료화 되기 쉽다. ④ 미리 행정 직영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10

## [쟁점토론2]

### “직영 센터는 능력있는 전문가 채용이 훨씬 어렵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행정 직영 센터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 전문가(활동가)들이 꺼려 한다.</li> <li>②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는 인건비가 너무 낮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다.</li> <li>③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행정이 꺼려하기에 쉽지 않다.</li> <li>④ 결국 민간위탁 방식이 자유롭고, 겸업(투잡)하기도 좋아 전문가 채용에 더욱 유리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상근자 인건비를 능력에 맞게끔 인정하지 않기에 전문가 채용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li> <li>② 오히려 행정의 임기제 공무원 대우가 훨씬 낮고, 또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라도 행정 실무를 배울 수 있기에 전문가 채용에 더욱 유리하다.</li> <li>③ 민간위탁 센터는 많이 복잡하여 전문가가 오지 않으려 한다. 특히, 초기단계에는 더욱 그러하다.</li> </ul>

11

## [쟁점토론3]

### “직영 센터는 민간위탁보다 사업 추진이 훨씬 어렵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행정 직영은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과목을 모두 나누어야 하고, 변경도 쉽지 않기에 사업 추진이 자유롭지 못하다.</li> <li>②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끔 그때그때 대응하지 못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li> <li>③ 결재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많아 결국에는 행정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밖에 못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민간위탁이라고 사업 추진이 쉬운 것은 아니다. 행정과 모법인의 간섭이 심해 '시어머니'가 돌인 셈이다.</li> <li>② 특히 민간위탁 초기에는 업무 범위도 불명확하고 사무편람도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많다.</li> <li>③ 행정의 요청이 수시로 있어 본연의 고유 사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li> <li>④ 오히려 행정 직영이 '시어머니'도 한 명이고, 행정과 수시로 협의하니 사업 추진이 더 쉽다.</li> </ul>

12

## [쟁점토론4]

### “직영 센터의 센터장은 임기제 공무원이 말아야 한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행정 직영 센터의 센터장이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면 '기안 권한' 이 없기 때문에 센터장 역할을 못한다.</li> <li>② 담당 공무원이 대신 기안을 모두 해야 하기에 행정도 서류 일이 너무 많아진다.</li> <li>③ 적어도 행정 직영으로 센터를 설치한다면 센터장은 임기제 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임기제 공무원을 고집하면 행정과 갈등이 심해지고 센터 설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li> <li>② 센터장은 마을만들기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표성과 덕망, 리더십도 필요하기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li> <li>③ 공식으로 두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li> </ul>

13

## [쟁점토론5]

### “민간위탁 센터장은 법인 이사 중에서 말아야 한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중에서 한 명이 센터장을 맡아야 지역 현실도 알고,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다.</li> <li>② 반드시 상근이 아니라도 법인에서 센터장을 맡아야 센터와 법인이 분리되지 않고 고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li> <li>③ 특히 민간위탁 초기단계에는 센터와 법인이 서로 조율하고 협이할 것이 많기에 더더욱 법인에서 센터장을 맡아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인에서 센터장을 맡지 않더라도 전문성이 있으면 단기간에 지역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주민의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li> <li>② 지원센터는 집행기관이기에 법인 이사가 센터장을 맡으면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상하관계가 불명확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다.</li> <li>③ 반상근이라도 법인 이사 아닌 경력자가 센터장을 맡아야 내부를 잘 챙기고 법인과의 관계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li> </ul>

14

## [쟁점토론6]

### “직영 센터라도 민간의 조직화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행정 직영의 센터이지만 마을 위원장 협의회나 민간 네트워크 구축, 법인 설립 등을 위해 직접 노력해야 한다.</li> <li>② 민간의 조직화는 센터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핵심사업으로 이해해야 한다.</li> <li>③ 행정 담당 부서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민간 역량강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li> <li>④ 민간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가 결국에는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다양한 사업을 이와 적극 연계시켜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행정 직영 센터는 어디까지나 공공행정의 일부이기에 민간 조직화에 직접 개입하면 안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고유의 영역으로 스스로 해결할 일이다.</li> <li>② 직영 센터는 조례에 명시되거나 공공성이 명확한 업무에 국한해야 한다. 민간 위탁 센터는 법인 활동과 연계하여 민간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직영 센터는 자제해야 한다.</li> <li>③ 단, 지역역량강화의 일환으로 마을대학과 같이 조직화의 과정을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li> </ul>

15

## [쟁점토론7]

### “마을 현장 밀착성은 민간위탁 센터가 더 유리하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센터의 기본 역할은 마을 현장에 저가깝게 밀착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행정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센터의 활동이 더 자유롭기 때문에 유리하다 할 수 있다.</li> <li>② 행정 직영은 출퇴근 관리나 출장, 결과보고 등 서류문제가 너무 많아 현장을 쉽게, 자주 다니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간제 근로자 신분에서는 야근수당, 주말근무 수당도 없다.</li> <li>③ 민간위탁 센터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당도 신설하는 등 법인 사무편람을 통해 더욱 쉽게 마을을 다닐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민간위탁 센터라 하더라도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도 결코 간단하다 할 수 없다. 특히, 초기단계에는 사무편람도 정비되지 않아 마을을 쉽게 다니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li> <li>② 오히려 직영 센터가 마음만 먹고, 열심히만 한다면 마을 현장에 더 쉽게 자주 다닐 수 있다.</li> <li>③ 결국 센터 상근자가 하기 나름이고, 민간위탁 센터라 하여 마을 현장을 더 쉽게 자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li> </ul>

16

## [쟁점토론8]

### “민간위탁 센터의 모법인은 별도 사무국을 뒤편해야 한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민간위탁 센터는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회계도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li> <li>② 센터가 법인의 업무까지 지원하게 되면 고유 활동을 하기 어렵다. 센터 운영과 법인 운영은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분리해야 한다.</li> <li>③ 단, 초기 1년 정도는 법인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인 사무국 일(회계, 회의 준비, 기록관리 등)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li> <li>④ 하지만 센터 상근자들도 노력하겠지만 법인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당사자로서 수익사업, 보조사업 등을 확보하여 법인 사무국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원칙적으로 별도 사무국을 뒤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한국 농촌 현실에서 그렇게 하자면 여러 해가 걸릴 수밖에 없다.</li> <li>②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주장은 일을 편하게 하자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센터 상근자들이 역량을 강화하며 법인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li> <li>③ 법인의 이사들은 수당도 없이 자원봉사로 활동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까지도 너무 고생했다. 이제는 센터 상근자들이 조금 분발할 때가 아닌가??</li> </ul>

17

## [쟁점토론9]

### “민간위탁 센터의 사무편람은 행정처럼 명확해야 한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민간위탁 센터는 위탁 과정에서 행정예 산사업계획서와 함께 사무편람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li> <li>② 이 사무편람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고 세세하게 규정해야 한다.</li> <li>③ 상근자의 근무규정이나 내부 절차, 권한과 책임 등을 명시하기 때문에 행정과 법인, 센터 등 3자가 한자리에 모여 꼼꼼하게 검토하고 규정하는 것이 나중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li> <li>④ 사무편람은 세세할수록 좋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무편람이 꼼꼼할수록 유연함이 적어지고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기 어렵다. 행정과 마찬가지로 사사건건 규정만 따지게 된다.</li> <li>②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있다. 규정을 많이 만들어도 서로 불신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li> <li>③ 사무편람에는 기본원칙과 큰 틀만 규정하고 아주 세세한 것은 법인 내부 규정으로 처리해야 한다.</li> <li>④ 센터 운영에 관해 다 함께 모여 공동학습을 자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li> </ul>

18

## [쟁점토론10]

### “행정 직영 센터가 타 영역과 협력하기 훨씬 편하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행정 직영 센터는 행정 소속이기에 공공성 측면에서 민간단체를 소집하기가 용이하고 서로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좋다.</li> <li>② 민간위탁의 센터나 법인은 행정 협조 없이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에서 공신력이 약하고 잘 모이지도 않으며 협력도 잘 안된다.</li> <li>③ 행정 직영 센터일 때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야 센터가 활동하기가 훨씬 용이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민간위탁 센터는 위탁 과정에서 협력 네트워크에 대해 공동학습도 하고 법인 설립도 토론하였기에 훨씬 더 협력 관계가 용이하다.</li> <li>② 행정 직영 센터는 일부 민간단체와 협력관계가 있을 뿐 ‘싫은 소리’ 하는 단체는 상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체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 쉽다.</li> <li>③ 민간위탁 센터가 민간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행정과의 중간 역할도 잘 할 수 있고, 순수한 의미의 협력 네트워크에도 기여할 수 있다.</li> </ul>